
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(2024~2028)

2024. 1.



해양수산부

원양산업과



목 차



I. 추진배경	1
II. 원양산업 현황	3
III. 비전 및 추진전략	7
IV. 세부 추진계획	8
1.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	8
2. 안정적인 선원수급	10
3. 해외어장 확보	12
4.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	15
V. 추진일정	18

- (주요내용) 지속 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을 목표로, 5대 중점 분야*를 중심으로 16개 추진과제 수립
- * ①어선안전, ②어장개척, ③선원복지, ④산업구조, ⑤국제협력
- (성과)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정책지원 및 모범 조업국으로 평가
-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지원*을 통해 선박안전 및 선원안전 제고
 - * 원양어선안전펀드('19~)를 통해 7척(채낚기 5 + 트롤 2) 신조 지원(총 459억원)
 - 연안국 ODA 지원과 입어협상을 연계하여 유리한 조업조건* 확보
 - * 한-투발루 협상 시, ODA 계기로 입어로 동결 등 연 100만 불 절감 효과('22~'23)
 -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*으로 예비 IUU 어업국 해제**('21)
 - * IUU어업을 통한 불법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(「원양산업발전법」 개정, 19), 「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·운영 고시», 「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시」 제정 등('21)
 - **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(CCAMLR) 관리수역 불법조업 이유로 美에서 지정('19)
 - (과징금) 원양어선 2척*, 운반선 1척** 대상 총 5억원 부과('19~'23)
 - * ('22) 어획실적 미보고 1척, 2억원 / ('23) 보존관리조치 위반 1척, 1억원
 - ** ('23) 보존관리조치 위반 1척, 2억원
 - 수산자원 보존·관리를 위한 모범조업국*으로 평가
 - *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최우수 자료제출국 3연속 선정('21~'23),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SPRFMO·WCPFC 국제옵서버 인증
- (한계) 선원 수급 안정화, 신규어장 확보, 어선 현대화 확대 노력 필요
- 국적 원양어선원 감소세 지속, 신규 선원 육성 지원 필요
 - * 국적 선원 수/비중 : ('15) 1,492명 / 30.7% → ('20) 1,389 / 23.5 → ('22) 1,296 / 22.5
 - 해외수산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주요 어장국 ODA 확대 필요
 - * 원양 생산량 감소세('18, 46만톤 → '22. 40만), 기존·신규 어장 쿼터 유지·확대 필요
 - ** 중국·대만·일본 등 경쟁국은 태평양도서국 등에 학교·병원·도로 등 ODA 지원 中
 - 선령 31년 이상 비율이 81.4%로('22), 대체건조 확대 필요
 - * 척수/비율 : (~10년) 16척/7.8% → (11~20) 9/4.4 → (21~30) 13/6.4 → (31~) 166/81.4

II 원양산업 현황

1 원양산업 일반

□ (생산) 원양어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은 총 40만톤으로,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60만톤의 11% 수준('22년 기준)

* (양식) 227만톤 / 62.9% > (연근해) 89만 / 24.6 > (원양) 40 / 11.1 > (내수면) 4.3 / 1.4

[원양어업 Vs. 연근해어업]

구 분	원양어업	연근해어업
조업수역	공해 /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(EEZ)	국내 연안 / 우리나라 EEZ
어선규모	200톤 이상	(연안) 10톤 미만 / (근해) 10톤 이상
주요어종	참치 / 명태 / 오징어 / 대구 등	멸치 / 고등어 / 갈치 / 참조기 등

□ (수출) 수산물 10대 수출품목* 중 원양수산물 72%(412천톤/570천톤), 수산물 총수출액 중 원양수산물 34.3%(10.8억불*/31.5억불)

* ①김 ②참치(6억불), ③명태(2.6억), ④대구(1.3억), ⑤계, ⑥이빨고기(0.9억), ⑦연어, ⑧굴, ⑨고등어 ⑩전복

□ (기업) 총 39개사('22년 기준) 중 중견기업 8개(21%), 중소기업 31개(79%)

* 매출 : (100억원 미만) 10개사 → (100~500) 14 → (500~1,000) 3 → (1,000 이상) 8

** 보유 어선 : (10척 이하) 34개사(중소 30 + 중견 4) / (10척 초과) 5개(중소 1 + 중견 4)

□ (종사자) 전체 원양어선원 수는 보합*, 국적 선원 비율** 감소

* 전체 선원 수 : ('10) 5,898명 → ('15) 4,866 → ('20) 5,911 → ('22) 5,749

** 국적 선원 수/비중 : ('15) 1,492명/30.7% → ('20) 1,389/23.5 → ('22) 1,296/22.5

□ (어선) 총 204척 중 참치 어선 66.7%, 선령 31년 이상 81.4%*

* 척수/비율 : (선령 10년 이하) 16척/7.8% → (11~20) 9/4.4 → (21~30) 13/6.4 → (31~) 166/81.4

[업종별 원양어선('22)]

구 분	합계	참치연승	참치선망	트롤	오징어채낚기	공치봉수망	저연승-통발
어선 수(척)	204	108	28	15	21	19	13
생산량(천톤)	400	눈다랑어 18 황다랑어 12	가다랑어 202 황다랑어 40	남극크릴 31 명태 22	오징어 28	공치 3	이빨고기 4 대구 2

- (어장) 남태평양 도서국(투발루·키리바시 등, 참치)에서 원양수산물의 50% 이상을 생산, 남서대서양* (오징어), 남극해(이빨고기)에서도 조업
 - * 국제수산기구 부재, 별도 쿼터 배분 없이 각국 원양어선 경쟁조업

- 연안국의 입어료 인상, 투자·ODA-조업쿼터 연계 정책으로 조업 비용 증가 및 지역수산기구 조업감시·규제 강화

* '23년 우리나라가 확보한 총 쿼터량은 62천톤, 중국·대만·일본 등과 경쟁 조업 양상

[우리나라가 조업쿼터를 받는 지역수산기구(RFMO)]

구 분	기구명	기구별 관할 해역도
참치 지역수산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(IATTC) ▶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(ICCAT) ▶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 ▶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(CCSBT) ▶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(WCPFC) 	
비참치 지역수산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(NAFO) ▶ 북태평양수산위원회(NPFC) ▶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(SPRFMO) ▶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(CCAMLR) 	

* CCAMLR : 총 어획량만 결정, 국가별 배분 없이 올림픽 방식(선착순)으로 조업

- (국제규범) IUU 어업 근절, 조업 안전 확보 등 규제 강화 추세

- (IUU 어업) 지역수산기구는 국가별 어획쿼터 배분 시 **오피서버** 승선 등 과학적 기여도*, **보존관리조치** 이행 수준을 반영

* △자원 현황파악·평가를 위한 과학조사, △어획보고, △규제 준수 감시·감독 등 수행

- (자체조치) 국가별 조업감시센터(FMC) 운영, 항만국 검색(PSMA) 강화, 어획증명서 발급 등 회원국의 **자발적 노력**을 더욱 강조

- (어선안전기준) 어선 국제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**케이프타운협정***(CTA)을 채택(19), 발효 임박**, 국내 비준 절차 진행 중

* 24m 이상 공해조업 어선 대상, 선체 구조·복원성, 구명설비 등 선박 안전기준 규정

** (요건) ①22개국 비준, ②등록어선 3,600척 달성 1년 후 / (현황) ①21개국, ②2,603척

□ (대내) 생산 감소, 낮은 수익비, 어선원 감소

- (생산) 연안국 자원관리 강화, 공해조업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세 지속*

* 원양생산량 : ('90) 92만톤 → ('10) 59 → ('15) 58 → ('20) 44 → ('21) 44 → ('22) 40

- (수익성) 저가 어종(가다랑어·꽁치·크릴 등) 중심 어획으로, 톤당 생산액*(생산액/생산량) 기준 수익성 제한

* 톤당 생산액 : ('90) 53만원/톤 → ('19) 220 → ('20) 239 → ('21) 304 → ('22) 282

- (종사자) 원양어선 기피로 신규 유입 제한*, 고령화 심화**

* 수산계 고교 졸업생 : ('17) 762명 → ('21) 542 / 수산계 취업률 : ('17) 53.4% → ('21) 25.8

** 연령별 비중 : (30세 미만) 10.8% → (3~40대) 6.6 → (50대) 46 → (60세 이상) 36.6%

- (기업) 총 39개 기업 중 성장기업은 10개 내외*

* 대부분 총자산 감소 추세, 어업 외에 가공·유통도 병행하는 기업은 성장

□ (대외) 세계 수산물 소비는 증가, 조업규제는 강화

- (세계시장) 건강식품 인식 등 세계 수산물 소비 증가가 전망*되며, 생산에서는 양식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, 원양어업 등 어획 비중 감소세**

* ('17) 1억 7,200만 톤 → ('28) 1억 9,600만 (+14%, OECD-FAO)

** (어획) ('10) 9,110만 톤 → ('20) 9,030만 / (양식) ('10) 7,150만 톤 → ('20) 8,750만

- (연안국 정책) 조업국에 대한 ODA·투자*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쿼터·입어료와 연계

* '23년 기준, 우리나라는 러시아·뉴질랜드 등 9개국 현지합작법인 총 19개사(총 60척) 합작생산량 : ('16) 33만톤 → ('17) 35 → ('18) 38 → ('19) 37 → ('20) 33 → ('21) 30

- (국제조업규제) 전형적인 IUU 어업*뿐만 아니라, 강제노동(forced labor), 선원인권 침해행위**를 새로운 유형의 IUU 어업 행위로 규제 추세

* 과거 美(2회, '13.1월/'19.9월), EU(1회, '13.11월)에서 한국을 예비 IUU국 지정·해제

** (지역수산기구) WCPFC는 어선원 노동기준 개선 조치 논의 착수('21.7월)

(어선원노동협약) 기본 휴식시간 보장, 안전교육 의무화 등 규정(한국 미가입)

(정부·NGO) 미 국무부, 환경정의재단(EJF) 등에서 강제노동-IUU어업 연계 움직임

〈 주요국 원양산업 정책 동향 〉



중 국

원양어선 현대화, 국제협약 이행 지원

- ▶ **(현대화)**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수리·개조 보조금을 지원*하고, 위성항법시스템·원격단말기 등 기자재 보급 확대
 - * 원양어선 현대화에 약 11억 위안 지급('20, 약 2,007억원, OECD Fisheries Support Estimate)
- ▶ **(거점구축)** 국가 주도로 어업-양륙-가공-유통을 집적한 원양어업기지* 건설('19)
 - * 절강성 주산 : 전용부두·가공단지·콜드체인 유통시설 등을 집적화
- ▶ **(협약이행)** 책임조업(자원보존조치 등) 이행평가에 따라 기업 보조금 지급
 - * 절강성 주산 : 20개 기업(328척) 대상 국제협약 이행 보조금 4.5만 위안(약 800억 원) 책정



대 만

원양어선원 양성, 외국인선원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

- ▶ **(인력교육)** 원양어선원 양성과 승선 장려를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* 추진
 - * 연간 6명의 수산계 대학 졸업생을 선발하여 포상·직업훈련 지원
- ▶ **(송출국과 선원협력)** 인니 수산노조와의 협약 체결*을 통해 외국인선원 유입
 - * 가오슝시 원양협회-인니 수산노조('22) : 기술훈련·학술교류 강화, 외국인선원 인권보장 등
- ▶ **(근로환경)** 「어업인권 7대 전략('22~'25)」 수립
 - * 휴식시간 보장, 16개 주요 정박 어항 휴게·숙박시설 운영, 선상 인터넷(Wi-fi) 설치 지원 등



일 본

원양어업 구조개혁, 해외어장 활용 위해 국제협력

- ▶ **(구조개혁)** 수익성 회복(어장 예측, 설비 고도화 등), 자원관리·노동환경 개선형 어선 도입 등*
 - * 「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('20~'23)」 : 참치연승, 외줄낚시, 저인망 등 포함
- ▶ **(어장확보)** 태평양도서국 등 연안국, 지역수산기구(IOTC 등)과 함께 △시설·기술보급, △자원관리·활용, △ 어선원·지도자 교육·양성 지원 등 협력('22년 690백만엔, 약 66억원)



E U

아프리카·남미 지역별 수산협력사업 추진, 입어 기반 구축

- ▶ **(서아프리카)** 어촌·어항 현대화 지원
 - * 세네갈 : 프랑스·스페인(연 90만 유로, ~'24), 네덜란드('Senegal Fish' 프로젝트, ~'23)
 - ** 모리타니 : 독일(소형 어항 현대화, ~'27), EU(어촌공동체 지원, 연 1,650만 유로, ~'27년)
- ▶ **(동아프리카)** 지속 가능한 수산업 역량 교육(마다가스카르)
 - * 스웨덴 : 수산·양식·관광 / 독일 : 자원보호·이용 프로젝트 / EU : 양식 프로그램
- ▶ **(남미)** 전통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*(에콰도르 마나비)
 - * 이탈리아 : 수산자원 보전·관리, 수산인프라 개선 등 / 스페인 : 어구·어업기술 고도화 등

IV 세부 추진계획

1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

1 IUU 어업 대응체계 고도화

□ (제도) 국제공조, 항만국검색* 강화 등으로 IUU 어획물 유입 차단

*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해 IUU 어선 입항, 불법어획물 반입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

○ (국제공조) 조업감시센터*(FMC)와 지역수산기구(RFMO), 비정부기구(NGO) 등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IUU 어업 감시 능력 확장

* 원양어선 조업 과정 실시간 감시, 원격 지도·점검, 양륙량 검증 등 수행('14.5월~)



○ (검색확대) 운반선, 목록 미등재* 어선 등도 직·간접적 IUU 어업 관여 의심 시(제보·정황 등), 감시 대상에 포함하여 검색 강화

* 각 지역수산기구는 관할 수역 내 IUU 어업 적발 시, 해당 어선 IUU 목록 등재

□ (인력) 읍서버 의무승선율* 상향에 대비, 인력 확충('23년 67명)

* 조업감시·과학조사 위해 의무 승선, 지역수산기구는 의무승선율 상향(5→20%) 논의 중

○ 수산자원 평가를 위한 과학조사, 선내 불법행위 감시 등 역량 강화

□ (기술) 전자 모니터링(EM) 시스템* 개발·도입, 읍서버 미승선 선박의 IUU 어업 예방

* 인공지능(AI) 기반 조업영상 녹화·분석을 통해 현장 불법행위 통제, 과학자료 수집 강화

○ 태평양 참치 수산기구(WCPFC·IATTC)^{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전미열대대양어위원회}에서 '25년 EM 도입 예정으로, 시범사업*을 통해 EM 도입·운영을 위한 국내 법·제도 마련

* 참치연승 → 타 업종 확대, 과학자료 수집, 조업감시 등을 위한 기술·제도적 문제 해소

□ (의제 주도) 지역수산기구 국제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

- (롤메이커) 기후·노동 등 의제 발굴, 수산자원의 과학적 평가·보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여 지역수산기구 내 영향력·발언권* 강화

* 단기 조업이익에만 치중하여 국제규범 회피 시 IUU 어업 등 문제에 대해 쉽게 비난(easy target)받고, 어업권 주장 시 타국 설득·수용이 어려워져 지속가능한 조업이익 훼손 우려

[원양어업 국제규범 동향]

▶ (주요기관) 지역수산기구*가 중심, 국제해사기구**(IMO), 세계무역기구*** (WTO) 등도 연관

* 총 17개, 5개 참치 기구에서 전체 공해의 91% 관리 / ** 어선 안전기준 / *** 수산보조금 규제

▶ (주제) 공해 수산자원 보존, IUU 어업 근절, 해양생물 보호*, 어선원 강제노동 등 다변화**

* UN 해양생물다양성협약(BBNJ) 채택('23)→ 해양보호구역 설정, 환경영향평가 의무화

** 수산자원 관리 외 해양생물 보호, 강제노동 등 규범에 대한 관심 강화 및 무역 규제와 연계 추세

□ (네트워크) 국제수산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, 공동행동 적극 동참

- (의장단) 국제수산기구 및 회원국과의 소통·유대 강화를 통해 입어 교섭력을 강화하고, 핵심 기여국* 위상 공고화

* 의장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, 해당 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로 평가

('23) WCPFC-IOTC 의장, SEAFO 재정위 의장, CCSBT 부의장 등 5개 기구 의장단

- (공동행동) IUU 어업 근절*, ^{항만국조치협정} PSMA 이행**, 국제 공동 자원조사에 주도적 참여, 국제규범 주도국과 협력관계 유지·강화

* IUU 행동연합(미·영·캐나다, 노르웨이 등 참여) 가입 및 회의 개최·참여 등

** UN식량농업기구(FAO)와 협력,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검색관 교육·훈련 지원 등

□ (인력) 규범논의, 어업협상 등 대응 전문인력 육성기반 마련 추진

- 지역수산기구, FAO 등에서 논의되는 국제규범·선언 도입 효과 검토, 국제협상전략 수립 등에 상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*

* FAO 협력 아·태 지역 항만국 검색관 교육 등 현장 실무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계

- 신진연구자, 민간경력자, 산·학·연 채용연계 등 양성경로 다각화

2 안정적인 선원수급

1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

- (수산계고교) 수산계 고교-선사 간 연계를 통해 어선 승선 확대
 - (장학제도) 어선 승선 진로를 정한 학생에게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수여하고, 향후 대학 진학, 학점이수 등 학업 병행 지원
 - (산학연계) 전·현직 원양선원을 일일교사로 파견(선사→학교)하여 실무교육, 진로상담 등 지원
 - (설명회) 학교 선배가 후배를 대상으로 원양어선 해기사 진로 소개, 질의응답·상담 등을 통해 진솔하게 소통하는 설명회 실시
- (어선해기사) 일반인 대상 단기 어선 해기사 배출
 - (지원확대) 한국해양수산연수원(오션폴리텍 과정) 어선 해기사 양성 과정(5급 40명, 6급 20명) 지원율* 제고를 위해 교육생 생활비** 등 지원
 - * 5/6급('23년 신설) 입교생 : ('19) 33명→ ('20~'21) 0(코로나19)→ ('22) 36→ ('23) 32 / 11
 - ** 교육기간 : (5급) 총 5개월, 이론 4 + 실습 1 / (6급) 총 3개월, 이론 2 + 실습 1
 - (교육생 발굴) 민관 합동*으로 귀어귀촌인, 제대군인, 자립준비청년** 등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명·홍보 등을 통해 교육생 적극 발굴
 - * 원양선사·노조, 수협 일자리지원센터, 제대군인지원센터,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연계
 - **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 하는 청년(연 2,500명)
 - (행사연계) 선원·수산인의 날 등 관련 각종 행사 시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어선 근무 희망자를 발굴하여 교육·취업 연계

- (소득증대) 근로의욕·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제적 유인 개선
 - (선원공제) 자산형성, 노후안정 등 지원을 위해 공제제도* 신설
 - * (재원) 회원 납입금, 노-사 합동 출연금 등 / (내용) 퇴직연금·적립공제, 일상복지 등

- (복지개선)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근무여건, 복리후생 개선
 - (국제협약) 업종별 여건을 반영, 케이프타운협정(IMO)*, C188** (ILO) 등 국제 안전·인권·근로기준의 원양어업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
 - * 24m 이상 공해조업 어선 대상, 선체 구조·복원성, 구명설비 등 선박 안전기준 규정
 - ** 어선원노동협약(ILO(국제노동기구) Work in Fishing Convention)
 - (근무환경) 해양원격의료를 확대하고, 선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원양어선 개조(리모델링) 금융지원
 - (가족방문) 평균 승선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·외국인 원양어선원 대상 가족 현지 방문 지원(1명당 200만원, 총 50명)

- (인식제고) 헌신, 기여도의 공적 기념을 통해 직업적 자긍심 고취
 - (표창) 공공·민간에서 IUU 어업 근절 및 예방, 선원 양성 등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*를 각종 포상 대상에 포함(바다의날, 수산인의날 등)
 - * (공공) 조업 감시, 항만국 검색, 국제규범 대응 등 / (민간) 선원(장), 국제 옴서버 등
 - (명인제도)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장기간 안전 운항·조업에 기여한 모범 선원을 매년 선정, 칭호·증서 부여 등 추진
 - * '대한민국명장 제도(고용부)'는 22개 분야에서 매년 30여명 내외 선정·지원('86~)

- (권리보호) 외국인선원 차별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승선여건 마련
 - (신고·감시) 원양어선 내 인터넷 보급률(100%) 활용, 신고채널* 확대, 국제 읍서버를 통한 감시 등 선상 불법행위 신고·감시체계 강화
 - * 선원복지센터 상시 콜센터(1566-3151), 전용 신고 전자메일 운영 등
 - (교육) 차별, 강제노동 등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, 고충처리 등 소통을 위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* 제작·배포
 - *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외국인 원양어선원 주요 국가별 언어로 번역
 - (실태조사) 노·사·정, 시민단체 등 정례 합동점검
- (교육협력) 국내-해외 선원양성기관 연계, 우수 외국인선원 양성
 - (현지양성) 주요 원양어선원 송출국에 노후 원양어선을 훈련선으로 제공하고 원양어선원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ODA* 검토
 - * 인도네시아 등 송출국도 현지 자체 선원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
- (제도) 노사정 합의 바탕으로, 외국인 기관사 도입 기반 마련
 - (합의도출) 국적 선원 근로조건 개선, 고용안정 등 원양어선 외국인 기관사* 도입조건 합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** 추진
 - * 기관사는 상선·어선 공통 면허로, 상선으로 이직하거나, 육상 수리직 등으로 이탈 빈번
 - ** 외국인 기관사 도입 필요성은 원양 노사간 인식 공유(노사합의서 체결, '19.11월)
 - (시범사업) 참치연승 등 기관사 수급 불안 해소가 시급한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사 도입을 시범 시행

1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

□ (ODA 확대)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원조(ODA) 확대 추진

- (태평양도서국) 남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어장국* 수요를 반영, 어촌·어항 인프라 개선과 주민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를 연계 지원

* 투발루·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어장 어획량이 국내 원양어업 생산의 50% 이상

- (미입어어장보유국) 아프리카* 등 어장보유국가 대상 자원관리, 어업기술 이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ODA 사업 제안**

* (중국·EU 등) 아프리카 어장 진입 위해 수산자원관리, 어업인 역량강화 등 지원

** 어장성 확인 후 조업여건, 수원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

[연안국 ODA 사업(예시)]

어촌·어항 인프라 구축	수산자원관리	수산업 가치 제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어항·접안시설 건설 ▶ 가공·유통설비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* * 법·제도 정비, 장비 지원 등 ▶ 자원조사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어구·어법 보급 ▶ 품질관리, 인증제도 등 ▶ 해양환경 개선(폐어구 수거 등)

□ (투자 강화) ODA 지원 확대 및 기업 투자로 연계

- (비중확대) 원양어장국 ODA는 조업쿼터 확보, 입어료 절감 등 수산물 수급과 직결, 안정적 어장 확보*를 위해 규모 확대**

* 연안국은 어업협상 시 조업쿼터·입어료 등을 ODA 지원 규모와 연동하여 결정

** (23) 해양수산부 ODA 중 원양산업 관련 ODA 비중은 7% 수준

- (민간투자) ODA로 건설·설치한 어항, 냉동창고 등의 운영, 기술인력 파견, 현지인력 훈련 등을 통해 기업 어장확보 및 현지투자 여건 조성

□ (인적 교류) 연안국과의 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

- 친한인사 박사급 전문가 양성,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장학사업을 통해 수원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, 현지 공관에 해양수산 관계관 파견*

* 주피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기관급 파견(24.1), 국제수산외교 네트워크 구축

□ (어장개척)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해외어장 확대

- (아프리카*) 대중성 어종인 민어·조기·갈치 등 자원 풍부, 어업 기술 전수**, 장비 지원 등 민관협력을 통해 조업 타진

* '15년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한국어선 감척, 소수 합작어선만 조업 중

**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한국 수산기술 전수 요청 증가

- (북태평양*) 선호도 1위 어종 오징어 풍부, 자원조사를 추진하고, 어구·어법 개량** 등 지원

* 오징어유자망 금지(UN총회 결의, '89)에 따라 '93년부터 한국어선 조업 중단

** 일본 채낚기어선은 신형 어구를 사용하여, '17년부터 북태평양 오징어 조업 중

□ (자원조사) 기존 어장 유지, 대체어장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
- (남서대서양) FAO 41 어장(원양오징어 99% 생산) 유지*를 위해 자원 분포, 이동 특성 등을 파악(국제 공동연구),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비

* UN 해양생물다양성협약(BBNJ) 채택('23)으로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돼 지역수산기구 역할 강화 전망, FAO 41은 지역수산기구가 없어 조업 제한 가능성

- (러시아) 조업 어종*의 자원량, 감소 원인, 이동 경로 등 조사

* 매년 한-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명태·오징어 등 국내 어선 조업쿼터 결정

- (북극해)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·꽁치 등 자원 북상, 러시아·북태평양 조업선박*, 국립수산과학원 등 공동 조사

* 중층트롤, 대구저연승, 꽁치봉수망, 오징어채낚기 등

[주요 어종별 국내 원양어선 조업어장]

어 종	조업어장	원양생산량 추이(천톤)
명 태	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(EEZ)	('18) 24→ ('20) 27→ ('22) 22→ ('23) 28(잠정)
오징어	FAO 41(남서대서양) 등	('18) 34→ ('20) 37→ ('22) 48→ ('23) 33(잠정)
꽁 치	북태평양	('18) 23→ ('20) 6→ ('22) 3→ ('23) 3(잠정)
가다랑어	중서부태평양, 인도양 등	('18) 239→ ('20) 215→ ('22) 202→ ('23) 200(잠정)

4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

1 안전·복지형 원양어선 확대

□ (어선)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를 위해 노후 어선 신조 및 수리 자금 지원

- (신조) 원양어선안전펀드를 통해 선령 30년 초과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고, 신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* 검토

* 경영적자 지속, 선가 상승 등으로 건조자금 조달·회수가 어려워 선사 참여 제한
→ 쿼터 추가 배분, 허가 추가발급 등 검토

[원양어선안전펀드 개요]

- ▶ (자금구성*) 정부출자금 5 + 금융기관(선박담보대출) 3 + 선사 자부담 2

* 조성목표 : 총 1,860억원(~'26, 정부출자 930)

- ▶ (운영) 원양어선안전펀드를 통해 건조한 선박은 선박대여회사(SPC) 소유, 선사는 3년간 자금(자부담분) 거치 및 12년간 용선료 납부 후 선박 소유권 취득

- ▶ (현황) 오징어채낚기 5척, 트롤 2척 총 7척 신규 건조 완료*(~'23)

* 정부지원액 : 총 458억원(총 건조가액 921억원의 50%)

- (개조) 저탄소 설비 도입, 조업·생활공간 개선 등 친환경·안전성,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수리·개조비용에 대해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

□ (기자재) 친환경 어구·설비 등 용자 지원

- (어구) 그물, 집어장치 등 유실 폐어구를 통한 비의도적 어획, 해양 생물 피해, 해양오염 등 저감을 위해 친환경 어구* 설치 지원

인도양청치위원회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중서부대평양수신위원회
* IOTC, IATTC('19), ICCAT, WCPFC('21) 등에서 비어힘·생분해성 집어장치 사용 권고

- (설비) 국제규범에 부합*하는 대체 냉매, 냉동설비 등 교체 지원

* 기존 냉매는 오존층 파괴, 지구온난화 악영향으로 '30년 이후 완전 퇴출 계획

- (판로)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연계, 안정적 판로 확보·신시장 확대
 - (원료공급) 「수출진흥구역*」 입주기업 등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원양선사간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양수산물 판로 다각화**
 - * 원료 수급과 물류 환경이 좋은 항만 인근 부지에 수산식품 전용부두, 냉장·냉동 시설, 검역·검사·통관시설 등 수입-가공-수출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
 - ** 다랑어류의 70%는 태국 등에 통조림 원료로 수출, 명태·오징어·꽂치는 국내 판매
- (가공) 원양수산물 기반 간편식 개발
 - (간편식) 중견 원양기업(동원·사조 등), 중소식품기업* 등과 연계하여 명태, 오징어 등을 활용한 스낵, 밀키트 등 제품개발, 입점 등 지원
 - * 전국 7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연계, 제품개발·홍보·판로확보 등 지원
 - (고급화) 기존 강정, 죽·덮밥 등 일반식 외 참치 스테이크, 대구 피시앤칩스 등 고품질 즉석조리식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

[수산가공 간편식품 해외 사례]

			
일본 오징어튀김	중국 오징어 볼	태국 손질 고단백 참치	태국 참치 스테이크

- (마케팅) 국제인증 획득 지원 및 원양산 수산식품 홍보
 - (인증) 미국·일본·EU 소비자 중심으로 확대 중인 가치소비* 추세에 부합하는 국제인증 획득 지원
 - * 수산물 수입 시 지속가능성·모범어업 관련 유일 국제인증인 MSC(Marine Stewardship Council) 인증제품 선호 추세, MSC 인증 참치(원물)는 4~6% 높은 가격에 판매
 - (홍보) 국제인증(MSC 등) 획득 원양수산물, 원양산 수산가공식품 국내외 홍보·판촉* 강화
 - * 해외 10개 무역지원센터, 국제수산박람회, 캠페인·라이브 방송 등 전시·행사에 노출

- (해외투자) 합작법인* 설립과 현지 조업·가공·수출시설 건립을 지원
 - * 연안국 자원자국화,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에 따라 현지 합작어업 중요성 증가
국적/합작 생산량(만톤) : ('18) 46 / 38→ ('19) 51 / 31→ ('20) 44 / 33→ ('21) 44 / 30
 - 양해각서(MOU) 체결, 수요 맞춤 ODA 등을 추진하여 합작사업 수행, 수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연안국 투자·협력 강화

- (경영안정) 高환율·금리에 대응, 입어료·선원임금 등 부담 완화 지원
 - (경영자금) 환율*·유가 등 상승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 - * 해외수역 입어료, 외국인선원 임금 등 외화결제 빈번
 - (긴급지원) 재해,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외수역 입어 포기*, 조업 중단 등 경영 위기가 발생한 원양기업 대상 정책지원 방안 검토*
 - * 러-우 사태 발생 당시, 러시아 수역 입어 가능성 확인 과정에서 입어 지연·손실

- (제도개선)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방향 제도개선 추진
 - (수요발굴) 업종별 원양기업, 원양선원노조 등과 정기·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제도개선 수요를 조기 파악하고 적기 해소
 - (구조개편) 어선 현대화,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 정부 정책방향의 설명·설득*을 통해 노사정 합의 도출, 법령 개정 등 추진
 - *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 확대

추진 과제		추진 일정				
		'24	'25	'26	'27	'28
1.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						
① IUU 어업 대응체계 고도화	제도적 관리 강화					
	국제옵서버 인력 확충					
	전자 모니터링(EM) 개발·도입					
② 지역수산기구 참여협력기반 강화	원양어업 국제규범 논의 대응					
	국제 수산네트워크 참여					
	전문인력 육성기반 마련					
2. 안정적인 선원수급						
①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	수산계고교 활성화					
	어선해기사 희망자 발굴·육성					
② 원양어선원 삶의 질 개선	선원공제제도 마련					
	복지·근무여건 개선					
	표창수여 등 인식 제고					
④ 외국인 원양어선원 보호·관리	외국인 선원 권리보호					
	외국인 선원 양성					
	외국인 기관사 도입 기반 마련					
3. 해외어장 확보						
①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	연안국 맞춤형 ODA 발굴					
	민간투자 연계					
	인력 교류 활성화					
② 해외어장 진출 지원	신규 해외어장 확대					
	해외어장 탐색·조사					
4.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						
① 안전·복지형 원양어선 확대	원양어선 신조·수리 지원					
	친환경 어구·설비 등 용자 지원					
② 원양수산물 고부가가치화	판로 확대 지원					
	원양수산물 간편식 개발					
	국제인증 획득, 홍보 지원					
③ 원양기업 경쟁력 강화	해외투자 촉진					
	경영안정 지원					
	양방향 제도 개선					